주간통일정세 2011-10(2011.02.28~03.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0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조선청년행진곡' 발표…김정은 새 찬양곡?(2/2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찬양가요로 보이는 새 노래를 선보여 눈길을 끔.
- 노동신문이 27일자 1면에 2002년 4월 사망한 김원균의 곡에 김련호가 가사를 붙인 '조선청년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실었다며 이 노래의 악보와 가사를 소개
- 총 3절로 이뤄진 이 노래는 절마다 '김장군 두리(주위)에 뭉치자'는 가사가 담겨 있어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고자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음.

○ 北, 중국과 김정은 3월 방중 협의(3/1, 산케이신문)

- 북한과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의 3월 방중과 관련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는 3월 14일 직후 베이징을 방문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김정은이 방중 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과 회담할 예정이며 중국 측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신문은 "중국이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조기 방중과 지원 표명으로 북한에 대한 민주화의 영향을 저지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언론, 3.1절 맞아 자주통일·대화 등 촉구(3/1,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 등 북한언론은 3.1절 92돌을 맞아 내놓은 논평들을 통해 반외세·자주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틀째 접어든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을 강력히 비난

○ 노동신문, 후계자 김정은에 충성 간접 촉구(3/2, 노동신문)

- 대(代)를 이은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충성을 촉구

- 이 신문은 '위대한 혼연일체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의 혼연일체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영원한 통일체"라며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은 혼연일체의 대가 굳건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

北 업무중복 감시조 또 신설…주민 황당(3/3,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주민감시 조직인 '118상무'를 신설했으나 기존 조직과 업무중복으로 주민들이 황당해하는 것으로 알려짐.
- 3일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비사회주의 근절 교시(1월18일 방침)'에 따라 보위부와 검찰, 보안서 당기관의 합동조직인 118상무를 만들었으나 이 조직이 기존의 '109상무'와 하는 일이 거의 중복돼 간부들도 난처해한다고 보도
- 기존의 합동단속 조직인 109 상무가 주민들이 보유한 영상장비를 비롯해 마약과 밀수, 밀매 등을 단속해왔는데 신설된 118상무의 하는 일도 똑같다는 것임.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개관공연 관람(2/27, 중통·중방)
  -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김경희, 강석주, 주상성,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태종수,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등 동행 관람
- 김정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현지지도(3/3, 중통·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홍석형(黨비서), 김경희(黨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黨비서) 동행

나. 경제

"외국인 투자 안전" 北 이례적 보도(3/1, 조선중앙통신)

-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보도를 함.
- 합영투자위원회 소속인 리성혁이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함. 중앙통신은 리성혁의 직책을 밝히지 않음.
- 지난해 7월 발족돼 투자·유치를 지도, 관리해 온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유치와 관련해 전권을 가진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알려졌다. 북한 매체가 외국인 투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보도를 한 것은 드문 일임.
-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들이 명확히 규

제돼 있다"는 리성혁의 말을 인용
- 리성혁은 이 법이 북한 투자정책의 기본요구와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형식과 방법, 외국 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의 보장, 투자부문과 우대조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

北, 방북 서방 외교관에도 '식량달라'(3/2, 연합뉴스)
- 북한이 방북한 제3국 외교관에게도 식량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서방 외교관에게 "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이 외교관은 북측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국가 소속으로, 지난달 중순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함. 이 외교관은 북측의 갑작스런 쌀 지원 요구에 "깜짝 놀랐다"며 "북측으로부터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평양에 외제 전문점·신형택시·선불카드 등장(3/3, 교도신문)
- 평양에 외제 상품 전문점과 외화 선불카드 등 부유층을 위한 상품이 등장했다고 평양발로 보도
- 지난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평양을 방문한 교도통신 기자는 올해 평양 중심부에 문을 연 외국 상품 전문점에서 이탈리아제 넥타이와 구두, 화장품, 손목시계 등을 파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함.
- 또 평양역 앞이나 상점가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신형 택시가 늘었는데, 중국에서 제조한 서구 메이커의 세단이 많았고,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등이 택시를 이용하는 걸 목격했다고 함.

구제역 전문가팀, 방북 활동중(3/4, 연합뉴스)
-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통칭 국제수역사무국: OIE)는 구제역 전문가팀이 지난달 28일 북한을 방문해 활동 중이라고 확인함.
- "방북 중인 전문가팀이 현지 수의 당국과 함께 구제역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 활동을 하는 한편, 어느 백신이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전문가팀은 OIE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파견된 수의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10~14일 동안 북한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北, 對中수출 급증…1월 교역 작년대비 2.3배↑(3/5, 미국의소리(VOA))
- 지난 1월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의 3.5배로 늘고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총 3억5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배를 기록하는 등 북중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 북중간 교역액은 지난해 1월 1억4천800만달러의 2.3배로 이는 지난해 1~2월 두 달간 교역액 합계인 3억100만달러 보다도 많다"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2억 1천만달러였던 북중 교역액은 하반기에 월평균 3억6천만달러로 급증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은 작년 1억1천2백만달러의 2배인 2억2천 4백만달러, 수출액은 작년 3천600만달러의 3.5배인 1억2천9백만 달러"라며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함.

○ **中, 北 무역적자 일부 지급보증(3/6, 교도통신)**

- 중국 정부가 자국 무역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북한에 일부 무역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업체와의 거래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북한에 무역 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특별한 지원으로 보인다고 분석

■ **기타 (대내 경제)**

- 조선인민내무군 홍순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희천발전소 물길굴 공사 완료(2/25, 중방)
- 北 국가과학원, '휴대용반도체식폐하측정장치' 개발(2/28, 중통)
- 北 국가과학원 식료연구소, '연두부 생산방법'·'기능성 김치가공방법' 등 개발(3/3, 중통)

다. 군사

○ **방사포 장착 화력지원정 등 北무기 사진 공개(3/1, 연합뉴스)**

- 다연장 로켓(방사포)이 장착된 화력지원정 등 북한의 무기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됨.
- 1일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유용원의 군사세계'에 올라온 4장의 사진에는 북한의 해·공군 기지, 스커드미사일 공장, 레이더 및 지휘통제 시설 등이 담겨 있음.
- 이들 사진은 미얀마 군사대표단이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극비 방문한 과정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라. 사회·문화

○ **美보고서, 北 위폐·가짜담배 제작 계속(3/4, 연합뉴스)**

- 북한 내에서 가짜 담배 및 위폐 제작과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내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가 3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통해 밝힘.

- "북·중 국경지대의 메탐페타민(히로뽕) 밀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마약 밀매와 관련된 언론보도도 늘고 있다"면서 "단둥, 옌지, 그리고 멀리는 창춘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중국 범죄조직과 북한의 밀거래자들 사이의 거래가 있다는 한·중 양국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 보고서는 중국의 범죄조직에 전해진 북한산 메탐페타민이 계속 압수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의 메탐페타민 제조와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 및 계속되는 위폐, 가짜담배 제조는 북한에서의 단속이 느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각지서 '식수절' 나무심기 궐기모임(3/3, 평방)
- 北 국가우표발행국, 새해공동사설 반영 우표(개별우표 5종) 발행(3/1, 중통)

2. 대외정세

北경제대표단 내달 미국 방문(3/4,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의 경제 관련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내달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방미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수전 셔크 소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대표단은 내달 20일부터 2주일여 동안 미국 서부 샌 디에이고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힘.
- IGCC는 1993년부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 국방 분야 관리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다자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개최하고 있음.

北최태복, 28일 영국 방문(3/5,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오는 28일부터 4일간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 영국 의회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최태복 의장이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초청으로 오는 28일 영국을 방문해 의회와 법원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지난해 영국 의회대표단이 북한과 수교 10주년을 맞아 방북했던 것의 답방"이라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캐럴라인 콕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영국 의회 대표단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등을 인권문제를 거론함.

3. 대남정세

北 '서울 불바다' 위협 이틀째 대내방송(2/28,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28일에도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계속 내보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오후 1시30분께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전한 이후 중앙방송은 당일 오후 3시10분, 9시10분에 이어 28일 오전 6시와 7시 성명 내용을 반복해 전했으며, 조선중앙TV도 27일 오후 5시10분과 8시 보도를 통해 판문점대표부 성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함.
- 반면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남한의 심리전을 겨냥해 임진각 등에 대한 조준격파사격을 언급한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개성공단내 북한 남성 근로자 늘었다(2/28,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 설립 이후 전체 북한 근로자의 84~85%를 차지하던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7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해까지 15% 수준을 보이던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26%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함.

北, '흡수통일 非고려' 金총리 발언 증명돼야(3/1, 조선중앙통신)

- "'흡수통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황식(총리)의 말은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조선의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그가 한 말이 '제도통일'을 주장해온 남조선 당국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의 말이 얼마나 진정이고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한미 합동군사 훈련' 관련 보도]

○ **노동신문, 조선반도에 핵전쟁 위험 커져(2/2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28일 이 연습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은 최근 NLL 이북 서해안 포병부대와 해군부대에 특별경계근무태세를, 나머지 부대에는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각각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 '핵참화' 거론하며 거듭 '핵'위협(3/1, 조선중앙통신)**

-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 이틀째인 1일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전쟁이 나면 핵참화만 일어날 뿐이라며 핵무기를 내세워 위협을 되풀이함.
-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논설 '북침기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문을 게재해 "남조선 호전광들은 지금 미국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평화의 기회는 사라져 가고 오히려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참화 뿐"이라며 "전쟁위험을 가시게 하려면 내외 호전세력의 북침전쟁 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 **北, 정당방위 위해 물리적 대응 불가피(3/1, 조선중앙통신)**

-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이틀째인 1일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밝힘.
- 담화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이며 핵전쟁 연습"이라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를 놓고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심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시점에 기어코 이 연습을 강행하는 자체가 명명백백한 도발"이라고 주장

○ **北, 한미훈련 중지하고 대화분위기 조성해야(3/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언론매체들이 1일에 이어 2일에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김.
- 노동신문은 이날 '위험천만한 북침 핵시험전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범죄적인 전쟁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지금으로 말하면 대화 쌍방이 군사적 행동을 자중하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주장

○ **北, 군사훈련 대미 비난…"예측할 수 없는 후과"(3/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최근 한미·미일 합동군사연습이 동시에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해 "지역 안전에 예측할 수 없는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
- 통신은 '동북아시아를 뒤흔드는 전쟁폭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요격 모의연습을 위한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일본의 요코스카(横須賀)기지에서 강행됐다"며 "이는 지역 맹주로서 지위를 보다 확고히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남하 北주민 31명' 관련 보도]

○ **지난달 남하 北주민 31명중 4명 귀순(3/3, 연합뉴스)**

- 통일부는 3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측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이에 따라 이들 4명을 제외한 27명을 남하 27일 만인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이들이 타고온 선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임.
-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송환 계획을 통보함.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자 4명은 남성 2명, 여성 2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주민의 남하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 표류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울릉도를 통해 넘어온 4명 가운데 1명만 송환되고 나머지 3명은 귀순한 바 있다. 2005년 9월 연평도 해상을 통해 내려온 2명 가운데 1명은 귀순하고 1명만 송환됨.

○ **北, 남하 주민 31명 모두 송환해야(3/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을 모두 돌려보낼 것을 요구함.
-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선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인도주의 견지에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힘.
- 27명을 4일 송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북한 대외방송인 평양방송은 4일에도 반복하여 전함. 전날 오후 10시 23분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담화 내용을 이날 오전 7시25분 그대로 소개, 그러나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이나 조선중앙TV 등 북한 주민들의 시청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는 적십자회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전하지 않음.
  *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재언 적십자회 위원장은 이날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기상악화로 표류돼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과 배를 표류 당시의 해상경로로 돌려보내라"고 촉구

○ **정부, 귀순 北주민에 간호사·통계원도 포함(3/4, 연합뉴스)**

- 통일부는 "남하한 사람은 대부분 황해남도 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전함. 이중 귀순을 희망한 4명은 선장 옥모(38.해주)씨를 비롯해 통계원 박모(여.22.해주)씨, 간호사 봉모(여.21.해주)씨, 무직 홍모(44.강원 원산)씨 등 남녀 각각 2명임.

○ **북한 주민 27명 판문점 송환 무산(3/4, 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달 5일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을 4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고 이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6시께 판문점 북측 연락관이 전화를 걸어 주민 31명 전원을 무조건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구두 통지를 전달했다"면서 "이에따라 대기하던 북한 주민 27명은 숙소로 돌아갔다"고 말함.
  * 정부 소식통은 5일 "주말과 휴일에는 판문점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다음 주 초인 7일 연락관 통화를 하고 북측에 27명의 수용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함.

○ **北, 주민 전원송환 위해 가능한 수단 총동원(3/5, 조선중앙통신)**

- 남하 주민 31명 전원의 송환을 재차 요구하고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힘.
-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보낸 구두통지문에서 "우리 주민들 모두 처음부터 공화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남관계에 엄중한 후과(결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
- 그러나 통지문은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6일 조미군부대령급회담 북측 단장이 미군 측에 항의통지문을 보내 "북한 주민 31명 전원을 송환하는 데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밝힘.
  "남조선 강점 미군은 아무런 명분이나 과학성도 없는 모략적인 유엔사 특별조사결과라는 것을 꾸며내 괴뢰당국의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하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며 "역적패당의 악랄한 동족이간 책동에 적극 동조하는 미군 측의 비열한 처사와 관련해 항의통지문을 보냈다"고 전함.

['3.1절' 관련 보도]

○ **北, '3.1절 기념사' 비난…'행동' 촉구(3/4, 우리민족끼리)**

-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

-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며 대화제의에 응해나오는 것만이 북남대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진정성을 검증해보이는 실천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논평은 이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호칭하는 등 이 대통령이나 남한 당국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이나 표현은 자제하면서 대화 재개를 간접적으로 촉구

○ 北, 3.1절 반일 공동성명 채택하자(2/28, 연합뉴스)

- 북측이 3.1절을 앞두고 반일 공동성명이나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우리 측 정당과 종교·사회단체에 잇따라 발송한 것으로 확인
-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불교도연맹,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은 최근 민주노동당과 조계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남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앞으로 각각 팩스를 보내 3.1절 공동문건 채택을 요구했으며, 북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공동성명(결의문) 초안까지 보내온 것으로 전해짐.

○ 3.1절 기념 남북교회 공동선언문 발표(3/1, 조선중앙통신)

-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3.1절을 맞아 지난달 27일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예배처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전함.
- 공동선언문 발표는 남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정부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및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

○ 北신문, 南에 대화제의 수용 재차 촉구(3/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거론하면서 "진심으로 북남간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대화제의에 조건 없이 응해 나와야 한다"며 대화 제의 수용을 거듭 촉구
-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동신문은 '허무맹랑한 말장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세력은 '책임 있는 조치'니 뭐니 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내걸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차버렸다"며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고 단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진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남조선 당국자는 대화를 방해하는 전제조건을 하나도 거두지 않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 등 대결폭언을 늘어놓았다"며 "대화에 대한 그 어떤 진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힘.
- 이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행동이 중요하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임.

북한 해주·개성지역서 GPS 교란전파 발사(3/6, 연합뉴스)

-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수신장애 현상은 북한지역에서 발사된 GPS 교란 전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6일 정부와 군,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기지국에서 GPS 수신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날 북측 지역에서 강한 통신교란 전파가 날아온 것이 포착됨. 이 교란 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짐.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교란 전파가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면서 "북한이 전파를 지속적으로 발사하지 않고 짧게 간헐적으로 쏜 것으로 미뤄 해외에서 도입한 GPS 전파 교란장비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함.

靑, 디도스 공격 완전히 차단(3/4, 연합뉴스)

-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 "정상적인 트래픽(접속량)보다는 많은 수준의 공격이었으나 완전히 공격을 차단해 단 1초도 문제없이 정상운영을 했다"고 말함.
-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뿐 아니라 40개 공공기관이 어제 아침부터 함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날 오후 공격이 소강상태로 청와대의 모든 서버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 "어제와 오늘 청와대가 공격받은 수준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100으로 봤을 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격이었다"면서 "현재도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함.
- 청와대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의 주체가 북한 정보 부대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격 주체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함.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주간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우다웨이 "北 UEP, 6자회담서 논의돼야"(3/5)

-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5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음.
- 우다웨이는 이날 전국인민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 유관국들이 회담 재개에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음.
- 우다웨이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알려진 중국 측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북한 UEP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 입장과 상반됨.

美 "남북관계 개선은 北진정성 증명 방법"(3/5)

- 미국은 4일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의 진정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한 방안이라고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힌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설정 반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제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단지 (대화가 열리면)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이해와 기대가 모든 당사국들 사이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대화가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하나의 지표는 북한이 보여주는 진정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 그는 "이(북한의 진정성)를 증명할 하나의 방법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현재의 긴장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협의의 결과 나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장성명"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 측과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음을 전했음.
- 이 밖에 그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한 보도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왜 우리가 그런 보도에 우려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은 항상 중국에 간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음.

우다웨이 "6자 재개에 전제조건 설정 반대"(3/4)

-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4일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조건을 다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지난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중인 우다웨이는 이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2년째 교착된 상태"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
- 그는 이어 "중국은 회담 재개에 긍정적이고 아량있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며 지금처럼 교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그러면서 "회담 재개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은 그런 어려움이 조기에 극복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신화통신은 북핵 6자회담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우다웨이는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이고 유관 국가들간에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며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보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 "그런 목표는 중국의 이익일 뿐더러 유관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아울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부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모든 제의들을 지지한다"면서 "어느 측도 6자회담 재개에 전제조건들을 설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美 "안보리 北 UEP 대응서 中지지 기대"(3/4)

- 미국은 3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지를 기대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UEP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중국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가능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안보리 모든 회원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日 6자회담 수석대표 7~9일 방한"(3/3)

-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음.
- 스기야마 국장은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

고,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 2000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한 스기야마 국장은 지난 1월11일 전임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주 인도 대사 대신 아시아·대양주 국장에 임명됐음. 한·일 양국 6자회담 대표는 지난달 17일 도쿄에서도 만난 적이 있음.

한·미, 北 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3/2)

- 한·미 양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하기로 했음.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resolution) 보다는 낮은 안보리 대응조치이나 내용상으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컨센서스(Consensu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조치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했음.
- 아인혼 조정관은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민수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협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진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민동석 "비핵화 진전있는 6자회담 희망"(3/1)

-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 "우리는 일단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민 차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f Disarmament)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6자 회담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음.
- 민 차관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랫동안 노골적으로 이를 묵살해 왔다"며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두 차례 핵 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작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6자 회담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촉구했음.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 무장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NSS) 주최국임을 상기시킨 뒤 "이번 회의가 핵 테러 위협을 부각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뤄낸 성과를 입증하고 더 좋은 세계, 더 안전한 세계로 이끄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그는 "수십년 동안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협상 회의체로서 기여해왔다"며 군축회의 활성화를 강조한 뒤 "한국은 군축회의의 모든 주제 가운데 무기용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이 가장 성숙돼 있고 긴급한 것이라는 견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FMCT 협상은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FMCT와 곧 실행에 들어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군축과 비확산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韓美, 北 김정일 유고 대비 훈련 강화"(2/28)

-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대폭 늘린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이날 시작된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저지, 대량 난민 발생에 따른 치안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8년 여름 뇌졸중 증세를 보였던 북한의 김 국방위원장이 지금도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고 보드카 등 독주를 즐긴다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언제 뇌졸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올들어 기존 훈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난민의 대량 발생,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등 북한의 비상사태를 상정해 작성한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한 훈련을 대폭 강화했음.
- 또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미군 부대와 한국군이 북한 내 대량파괴무기의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관리에 두는 작전과 전단 등을 사용해 북한 내 치안을 유지하는 작전 등을 훈련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美의회 '북한 청문회' 잇따라>(3/6)

- 올 1월 새로 출범한 제112대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음.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10일 '북한의 불바다(발언): 괴롭힘, 벼랑끝외교, 협박'을 주제로 북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예정임.
- 북한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연습을 앞두고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 자문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참석, 북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힐 예정임.
- 이 밖에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앞둔 다음달 12일에는 상원 군사위원회가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사령관과 윌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함. 이 청문회는 기본적으로는 예산 관련 청문회이지만,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임.
- 미 의회에서 이처럼 북한 관련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대한 의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北, 군사훈련 대미 비난…"예측할 수 없는 후과"(3/5)

- 북한은 5일 최근 한·미, 미·일 합동군사연습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해 "지역 안전에 예측할 수 없는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동북아시아를 뒤흔드는 전쟁폭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요격 모의연습을 위한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일본의 요코스카(横須賀)기지에서 강행됐다"며 "이는 지역 맹주로서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음.
- 논평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전략에 맞게 무력을 증강해 이 지역에서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빈번히 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미국, 일본, 남조선(한국) 사이의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이고 '아시아판 나토(NATO)'의 실전태세 점검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北 경제대표단 내달 미국 방문"<VOA>(3/4)

- 북한의 경제 관련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내달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4일 전했음. 이 방송은 또 북한 주민에게 인기를 끄는 대동강맥주도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다고 전했음.
- 이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방미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수전 셔크 소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대표단은 내달 20일부터 2주일여 동안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음. IGCC는 지난 1993년부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 국방 분야 관리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다자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개최하고 있음.
- 셔크 소장은 작년 9월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방북해 북·미 간 민간교류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이번 방미는 셔크 소장의 방북 당시 초청에 북한이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음.
- VOA는 "북한 대표단은 샌디에이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리 등을 접할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전했음.
- 이 방송은 또 뉴욕의 수입업체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 대표가 인터뷰에서 "작년 9월 미국 정부로부터 대동강맥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받은 수입물량은 1만7천640 상자로 1차로 컨테이너 3~4개 분량인 2천~2천500상자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대상으로, 미 정부는 북한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은 뒤 건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함. 박 대표는 "현재 상표를 영어로 교체하는 기술적인 작업만 남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동강맥주를 미국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美보고서 "北 위폐, 가짜담배 제작 계속"(3/4)

- 북한 내에서 가짜 담배 및 위폐 제작과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내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3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 이 보고서는 또 "북·중 국경지대의 메탐페타민(히로뽕) 밀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마약 밀매와 관련된 언론보도도 늘고 있다"면서 "단둥, 옌지, 그리고 멀리는 창춘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중국 범죄조직과 북한의 밀거래자들 사이의 거래가 있다는 한·중 양국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
- 보고서는 중국의 범죄조직에 전해진 북한산 메탐페타민이 계속 압수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의 메탐페타민 제조와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 및 계속되는 위폐, 가짜

담배 제조는 북한에서의 단속이 느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중국 국영라디오 방송을 인용, 지난 2009년 상반기 북·중 국경지대인 지린성에서 압수된 마약의 양이 가장 많았고, 소위 '크리스탈 메스(얼음)'로 불리는 마약의 압수 규모는 2008년에 비해 2배였다고 소개했음.
-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는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북한이 마약거래를 중단했다거나 계속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국무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했던 보고서와 같이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된 대규모 마약 거래는 중단됐거나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한국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음.
- 한편 국무부는 이날 '돈세탁과 금융범죄'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북한을 지난해와 같이 '돈세탁 우려(Countries of Concern)' 국가로 분류했음.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를 돈세탁 주요 우려국가, 우려국가, 감시대상국가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우려국가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60여개 국가가 꼽혔음.

캠벨 "北, 행동 바꿀 경우 관계정상화"(3/2)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미·북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캠벨 차관보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게는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 나갈 길을 걸을 것이냐, 대결과 고립의 노선을 지속할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은 의미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국제법 준수, 도발적 행위 중단 등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를 향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북한의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음.
- 남북대화와 관련, 그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

격 등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며, 남북대화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최근 남북군사회담 결렬과 관련, "대령급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무산시킨 북한의 결정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허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북한의 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음.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 (미국의) 고위급 팀이 이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과 미얀마간의 협력설과 관련, "버마(미얀마)에 대한 소형 화기 및 일부 미사일 부품 등 재래식 기술들의 제공을 북한이 늘리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동남아 국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전했음. 그는 지난해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온 불법 화물들에 대한 차단이 여러 국가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음.

美, 투명성 조건부 대북 식량지원 강력시사(3/2)

- 미국은 1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음.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필요한 수준, 다른 나라보다도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식량 수요에 대한 철저한 평가조사, 적절한 식량지원 관리·모니터링 및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현재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 중"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식량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북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향후 북·미 간 접촉이 있을 것임을 밝혔음. 그는 지난 2009년 식량지원 당시의 분배 투명성에 대해 모니터링했던 정

도의 수준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이와 관련,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직 여전히 검토 단계이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음. 그는 식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이라는 것이 표시된 채 포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했음.
- 그는 식량을 지원할 경우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어려움 여부에 관계없이 핵개발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여기에서 선택은 이(북한) 사람들을 굶어죽도록 하느냐 여부이며, 이는 솔직히 인도적 문제로, 정치적인 담론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및 국제기구·단체들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밖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중국 측에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다수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을 선택하고 있지만, 미 대사관이나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정당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북한으로 균형된 정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국 내 독립적 (대북) 방송과 미 방송위원회(BBS), 미국의 소리 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보즈워스 "美대북정책목표 정권교체 아니다"(3/2)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권교체'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음.
-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가능성을 밝혀왔고,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 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제재가 그 자체로서 이(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가 이런 어려움들과 도전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음.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다가올 대화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길 원한다"면서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우리는 구체적 결과를 생산해 낼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음.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북한과 함께 했던 합의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 안정을 향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길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는 지난해 일련의 북한의 도발 원인에 대해 후계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 내 다양한 세력들간의 다툼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음. 그는 또 "북한이 무시당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로 꼽았음.
- 이 밖에 "북한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궁극적인 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정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中, 北 무역적자 일부 지급보증"<교도>(3/6)

- 중국 정부가 자국 무역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북한에 일부 무역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업체와의 거래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북한에 무역 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특별한 지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미 의회조사국은 이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유엔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 세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22억 8천 달러였던 반면 수입은 12억 달러로, 북한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10억 달러가 넘었음. 의회조사국은 이밖에 중국 건설업자가 거의

무상으로 평양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음.

-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북한의 최대 식량지원국임에도 지원 용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음. 다만 2005년 50여만t에 달했던 식량지원이 2008년과 2009년 각각 10만여t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지원만 하기로 정책을 바꾼 게 아니냐고 분석했음.

"北, 對中수출 급증…1월 교역 작년대비 2.3배↑"(3/5)

- 지난 1월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의 3.5배로 늘고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총 3억5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배를 기록하는 등 북·중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전했음.
- VOA는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 북·중 간 교역액은 지난해 1월 1억4천800만 달러의 2.3배로 이는 지난해 1~2월 두 달간 교역액 합계인 3억100만 달러보다도 많다"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2억1천만 달러였던 북·중 교역액은 하반기에 월평균 3억6천만 달러로 급증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방송은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은 작년 1억1천2백만 달러의 2배인 2억2천4백만 달러, 수출액은 작년 3천600만 달러의 3.5배인 1억2천9백만 달러"라며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음.

"北, 중국과 김정은 3월 방중 협의"<산케이>(3/1)

- 북한과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의 3월 방중과 관련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는 3월 14일 직후 베이징을 방문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음.
- 신문은 "김정은이 방중 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과 회담할 예정이며 중국 측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중국이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조기 방중과 지원 표명으로 북한에 대한 민주화의 영향을 저지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멍젠주 공안부장은 지난달 14일 평양을 방문해 김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으며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취임에 대해 "혁명의 승계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음. 당시 김 국방위원장과 멍 공안부장의 만찬에 김정은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초청도 이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신문은 "지난달 20일에는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현재 북한은 중국의 전인대가 끝나는 3월 14일 김정은이 방중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이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직후 방문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음.
- 신문은 이어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초청은 작년 9월 말 방중했던 최태복 조선노동당 서기에게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처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스티븐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3/3)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재배치는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2일 강조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낮 12시(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에서의 초청 강연 이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어제(1일) 대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과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술핵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방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에 대해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를 해줄 것으로 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몇 주 내 발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토의절차를 거쳐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미국민 모두 한미동맹과 미국 경제를 위해 이번 FTA 비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최근 스티븐 워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근거해 한 말"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항상 필요성과 이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

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진다"며 "이 원칙은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변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음.

- 중동을 휩쓸고 있는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물은 데 대해서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가장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인터뷰에 앞서 스탠퍼드대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동맹 :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U.S.-Korea Relations: Where We've Been, Where We're Going)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연을 하고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튼튼하다"고 강조했음. 스티븐스 대사의 강연 이후 참석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FTA 문제와 통일에 대한 한국민들의 생각, 6자회담에 대한 전망,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민들의 정서 등 각종 질문이 쏟아졌음.

한·미 원자력협정 2차 협상 개시(3/3)

-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이 개시됐음.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조현 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협상에 착수했음.
-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기본 방향과 의제 등을 협의했으며 분기별로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양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새로운 협정의 기본골격과 협상 메커니즘을 협의하고 한·미간 상업적, 산업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조현 전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은 총론적 협의"라며 "한·미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과 기술적 협력, 산업적 협력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상위급 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서로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양측은 그러나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제3국 이전 등 양국 간 민감한 쟁점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협상과 별도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아인혼 "美, 전술핵 재배치 계획 없다"(3/2)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밝혔음.
- 방한 중인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전술핵 배치 논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美,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제임스 서먼 지명(3/2)

- 새로운 한미 연합사령관에 제임스 D. 서먼 미 육군사령관(대장)이 추천됐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후임으로 서먼 사령관을 추천했다고 발표했음.
- 서먼 사령관은 합참부의장, 제4 보병사단장, 독일주둔 미 육군 5군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자유' 작전을 지휘하기도 했음.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지명절차와 상원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됨. 오클라호마주 출신인 서먼 사령관은 지난 1975년 임관했음. 2008년 6월 부임한 샤프 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게이츠 장관은 "서먼 장군은 미 대륙 내의 70만명 이상의 병사들에 대한 감독, 훈련, 보급 등의 책임을 맡으면서 육군의 가장 큰 조직을 현재 이끌고 있다"면서 "서먼 사령관은 이라크에서 사단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전장에서의 상당한 경험도 갖고 있다"고 밝혔음. 게이츠 장관은 이날 서먼 사령관 외에 미 특수작전사령관에 윌리엄 맥레이븐을, 남부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에릭 올슨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음.
-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과 관련, "한·미 간에 항상 하는 일련의 훈련의 일환"이라면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중요하게 만든 북한의 도발들을 지난해에 봤다"고 지적했음.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우리는 지난해 상당한 도전들을 받았다"면서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음.

나. 한·일 관계

한·일 기독의원연맹, 日에 과거사규명 촉구(2/27)

- 한·일 기독의원연맹은 27일 3.1절을 맞아 일본 정부에 과거사 진상규명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음.
- 연맹의 공동 회장인 김영진(민주당),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민주) 중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공동선언에는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시도를 포기하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음.
- 이와 함께 연맹은 한국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와 함께 과거사 청산과 화해를 이뤄내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음.

한·일, 강제동원 피해보상 '2+2' 해법 추진(2/27)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이른바

'2+2' 해법이 양국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는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정부 4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양국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됨.

- 27일 양국 정치권과 법조계, 산업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회의원과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사할린 동포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양국 기업과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내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음.
-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2+2'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이 전향적으로 '종자돈'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으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원 16명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시작될 예정임.
- 이 같은 구상은 지난 2000년 2차대전의 가해국인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억 5천만 유로(3조8천억원)와 26억 유로(3조9천억원)를 출연해 설립한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피해국 정부·기업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임.
- 이에 대해 대표적인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방향을 정하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 "포스코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중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를 비롯해 주요 공사와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망라돼 있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조심스럽고 민간 차원에서 나서서 피해자 보상과 지원 노력을 한다면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한국 측 정부·기업이 참가하는 2+2 형태의 기금 설립 논의를 알고 있다"며 "다만 일본 내에서는 확실한 보상 근거인 강제동원 명부가 있는 중국인 강제징용자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음.
-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일단 피해자들과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측 관련 동향에 민감하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 전후보상 문제 전문가인 경북대 법과대학 김창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2 해법을 통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진다면 식민 지배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며 "2+2 해법에 대해 한·일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다. 미·일 관계

○ 美·日 국방, 외교장관, 5월초 안보협의회(3/3)

- 미국과 일본이 5월초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이 일본의 대형 연휴인 5월초 워싱턴에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음. 미·일 안보협의의원회는 2007년 5월 개최된 이후 4년 만임.
- 일본 측은 정국 혼란으로 6월 말로 연기된 양국 정상회담이 불투명하자 우선 안보 관련 각료급 회의를 열어 동맹을 다지기로 했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미국 방문이 어려워지면 상반기로 예정됐던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도 유보됨.
- 미국과 일본은 6월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안전보장,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의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할 방침이었음.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예산관련 법안 성립이 불투명해진데다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 있고, 6월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일본의 정치 상황이 복잡해 간 총리의 운신이 어려움.
-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오키나와(沖繩)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하지만 이 문제 역시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과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로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당시 균열됐다가 작년 6월 간 총리 취임 이후 복원되고 있는 미·일 동맹의 진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

라. 중·일 관계

○ "中 초계기 센카쿠 접근..日 전투기 대응 출격"(3/3)

- 중·일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 중국 초계기 등이 나타나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중국 Y8 초계기와 Y8 정보수집기 등 2대가 2일 오후

센카쿠열도 부근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행했음. 이 과정에서 중국 비행기가 센카쿠열도에서 약 50~60km 떨어진 상공에 접근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영공 침범 위험'이 있다며 F15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음.

- 중국 비행기는 일본이 주장하는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고,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자 서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가 센카쿠열도에 이만큼 접근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음.

"日 외상, 중국 공적원조 대폭삭감 지시"(3/2)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중국에 대한 공적원조의 대폭 삭감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무상은 무상자금 지원과 기술협력 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음.
-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재검토하는 것은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한데다 작년 9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충돌 이후 악화된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공적원조는 차관 등 유상자금 지원은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으나 무상자금 지원과 기술협력은 계속되고 있음. 2009년도의 경우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을 위한 무상자금 지원이 13억엔(약 175억원), 기술협력은 33억엔(약 445억원)이었음.
- 정부 내에서는 공적개발원조를 중국에 계속하는 것은 후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내 여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음.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공적원조는 1979년 시작돼 2009년까지 유상자금지원은 3조3천165억엔, 무상자금지원은 1천544억엔, 기술협력은 1천704억엔이었음.

中·日 차관급 전략대화..관계 정상화 모색(3/1)

-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어선 충돌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음. 1일 홍콩 펑황(鳳凰)TV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2월 28일 도쿄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관계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음.
- 이번 전략대회는 2009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달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전 양국의 외교적 갈등을 봉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임. 중국 측에서는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 양국 대표단은 5시간 동안 관계 개선 방안, 정상 상호 방문 재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펑황TV는 전했음. 쌍방은 현재 중일관계가 점진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으며 내년 양국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고위층 상호방문 등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체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음.
- 장 부부장은 "양국이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음. 일본 대표단 관계자는 "작년 센카쿠 사건 이후 양국이 국장급 회담에 이어 차관급 회담을 가짐으로써 점차 관계를 정상화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음.

마. 중·러 관계

○ 中헤이룽장, 대러시아 무역 급증(3/4)

-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과 인접한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대 러시아 무역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월 헤이룽장성의 대 러시아 무역액이 5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고 하얼빈(哈爾濱) 해관(海關)을 인용해 4일 보도했음. 헤이룽장성의 무역액은 이 기간 중국의 대 러시아 전체 무역액의 10.2%를 차지하는 액수임.
- 이 기간 헤이룽장성의 수출액은 3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2억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8% 감소했음.
- 헤이룽장성은 의류와 농산품 등 전통적으로 대 러시아 수출을 주도해온 분야의 수출량을 더욱 늘리면서 전기 기계와 신기술 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힘쓰는 한편 목재와 원유, 비료 분야 수입을 늘리는 등 러시아와의 교역을 계속 증대할 계획임.
-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헤이룽장성에 매달 131만8천t의 원유 공급을 시작했고 한때 국경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327㎢ 규모의 헤이룽장성 헤이샤즈(黑瞎子) 삼각주를 공동개발하기로 최근 합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음.

바. 일·러 관계

○ <일본 우익단체 국기 모욕에 러시아 발끈>(3/3)

-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임.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일(현지시각) 이데 게이지(井出敬二) 주 러시아 공사를 불러들여 일본에서 벌어진 러시아 국기 모욕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항의하고 다시 한번 수사를 요구했음.

- 러시아는 이데 공사에게 수사나 관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일관계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문제를 일으킨 일본 우익단체 간부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음.
-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쿠릴열도를 방문하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달 7일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격렬하게 비난한 뒤 급속히 냉각됐음.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지난 7일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북방영토의 날’ 행사 당시 러시아 국기를 찢고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는 일본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게양된 국기에 대한 손괴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 형법 92조는 ‘외국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國章)을 손괴, 제거,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적용을 외국 공관에 걸린 국기로 한정하겠다는 뜻임.
- 러시아는 2일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을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와 교류를 통해 남쿠릴열도 반환을 추진해온 일본 삿포로(札晃)시의 ‘북방영토복귀 기성(期成)동맹’에 대해서도 “대표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